



FTA이후 한국농업이 나아갈 길

■ 윤주연/한국농어민신민행진국장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4월1일부터 협정이 발효된다. 이 협정이 발효되기까지 농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비 농업계와의 갈등과 대립 등 그 어느 시기에도 볼 수 없던 정치·사회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입 과수품종·제한품종 익비 잇갈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우리나라가 경제적 실익과 함께 자유무역국가로서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게 될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많은 농민들은 실의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또한 요즘 현실이다. 그것은 향후 경제적 측면에서 얻는 직접적인 이득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가장 피해를 보는 분야는 단연 농업분야, 농민이기 때문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경우 과수

농가는 물론 우리나라 농업 전 분야에 걸쳐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포도를 비롯한 복숭아, 자두, 단감, 감귤 등의 피해가 크며 이번에 협정에서 제외된 사과와 배도 시간이 흐르면서 소비대체, 작목 전환에 따른 공급과잉 등으로 안심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가 한양대 연구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과수분야의 피해는 10년 간 신선과일 3662억원, 가공용 2198억원 등 총 5860억원으로 추정한다. 품목별 피해 예상액은 포도의 경우 2286억원, 키위 347억원, 복숭아 273억원으로 보지만 과실 가공품의 경우 과실주스 및 통조림 등에 대한 관세인하로 사과, 포도, 복숭아 등 국산과실에 대한 가공용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과실 생산량 중 가공원료로 사용되는 비율은 연간 6~7% 수준인데, 이것이 칠레산으

로 대체된다면 타격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정부의 예측이 타 과실류나 과채류와의 소비대체, 피해 농가들의 작목 전환에 따른 타 작목으로의 연쇄 반응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실제 2000년 봄 오렌지 수입 폭증으로 국내 감귤을 비롯해 사과 배 등 저장 과일류는 물론 딸기 토마토 참외 수박 등 신선 과채류 값이 폭락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같은 해 한·중 마늘협상 파동으로 작목을 양파로 전환해 양파 값이 폭락한 사실이 있으며, 생각보다 칠레산 과실류 수입이 증가하거나 농가 불안심리로 포도, 복숭아, 키위, 자두 등 피해 작목의 농가들이 사과, 배 등 다른 과실류나 밭작물로 재배 작목을 전환한다면 타 작목 또한 과잉공급으로 가격하락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우려의 현상은 벌써 과수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한·칠레 FTA 비준 통과 후 국내에 유입될 과수의 품종 수요는 급감하는 반면 수입제한 품종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퇴출·워크아웃프로그램 등 도입 검토

정부는 한·칠레 FTA비준과 관련,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FTA 이행특별법과 FTA 기금 1조2000억원, 농가부채특별법,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농특세법 등 4대 지원법 119조원 투융자계획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FTA 관련 농업분야 피해대책으로 총 1조5190억원의 지원계획을 마련했으며 이 가운데 1조2000억원은 7

년간 FTA 기금으로 조성, 국고보조 및 융자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1조5190억원의 지원계획은 보조가 71% (국고 7567억원, 지방비 3188억원), 융자가 29%(국고 4433억원)이다. 정부는 대부분 사업이 50~100%의 국고보조이고 규모화를 위한 과원 매입은 융자지원이라고 설명한다. 주된 지원방향은 경쟁력 향상이 가능한 농가에 집중 지원하고, 농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선 대책 후 비준'이란 원칙을 갖고 나름대로 최선을 대해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농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그 내용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을 뿐 아니라 재원마련도 법제화되지 않아 농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수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현대화와 규모화, 생산기반정비 등을 통해 고품질 안전 생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예전에 실패했던 내용들이라는 것이 현지 농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그 단적인 예가 산지유통시설이 없어서 농민들이 제값을 못받는 것이 아니라 유통을 담당하는 협동조합이 경제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 것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대책이 농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그동안 누적돼온 농정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탓으로 볼 수 있다. 농업·농촌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비전도 없는 농업정책을 추진해 농민들의 불신을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농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

4월 1일부터 협정 발효, 소비대체·작목전환 따른 공급과잉 안심 못해 농업 발전가능성 활용, 농가·소비자·도시민 만족 위한 새로운 활로 찾아야

쓰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 솔직히 그 잘못을 인정하되 향후 자유무역협정이나 쌀 재협상,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등 대외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차제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다행히 농림부가 지난 3월 8일 청와대 업무 보고를 통해 이를 시인하고 앞으로 새로운 농업·농촌종합대책 추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농정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농업·농촌이 개방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간의 농정 로드맵을 수립한 것으로 밝혀 향후 주목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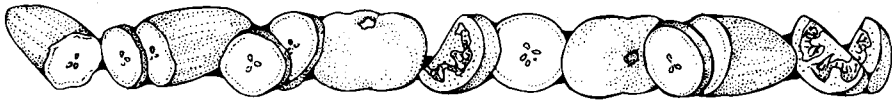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농업·농촌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대책과 농림부의 힘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농업·농촌 문제의 해법은 범정부적·범국민적으로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사상최대로 벌어지고 있고, 농촌의 생활·환경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이것은 농업·농촌문제의 차원을 떠나 사회적·국가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지난해 호당 농가소득은 244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3350만원의 73% 수준에 그쳤고, 올해는 23년만의 대 흉작으로 70%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그런데도

농가의 가계비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92년 1004만6000원이던 가계비는 2002년 1785만8000원으로 77.7%나 증가했다. 가계비 항목 중 증가율이 특히 높은 것은 교육비, 보건의료비(2배 이상), 교통통신비, 교제 증여비 등이다. 이런 농촌경제 여건은 농가부채의 증가로 귀결되고 또 그것을 짊어 버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정부가 올해 농가부채대책 추진으로 농업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 지원된 정책자금 금리인하(4.5%에서 1.5) 및 상환연기(5년 거치 15년 상환), 연대보증 피해특별자금 상환기간 연장,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자금 상설화, 상호금융 대체자금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인하(6.5%에서 3)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일률적인 상환유예와 금리 인하에 의존하는 부채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부채가 심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차별적 상환유예와 금리인하 대책은 소수농가만이 수혜대상으로 소득분배 왜곡과 재정낭비가 초래되는 만큼 농가의 경영 상태에 따른 차별적 부채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상적 상황이 가능한 농가는 정부가 지지하는 소득지지 시책을 활용하면서 규모를 확대하고 차별화를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퇴출 프로그램 및 워크아웃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농업인 의지·기관 단체 역할’ 절실

그러나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직접 지불제도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직접지불 예산을 2003년 9.4%에서 2013년까지 23%로 늘리고 친환경 축산 지불제, 조건불리 지역 지불제 등 다양한 지불제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참여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농업 전체예산 중 20%를 지불 예산으로 하겠다고 한 만큼 이를 조기에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 농업·농촌이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지만 그래도 농업의 발전가능성을 활용해 새로운 활로와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농업이 희망 없는 산업이 아니라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우선 자연조건과 기술·정보·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시켜야 한다. 생명공학과 전자공학 등의 첨단과학기술이 농업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됨으로써 농업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의 경제력 향상으로 농산물 수출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활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국내 농산물·식품시장의 성장과 소비자의 구매력이 계속 향상되고 있는 것도 농업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농산물의 국내시장은 산업화에 따른 소비자의 구

매력이나 구매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소득 증가, 탈 산업사회 진입 등으로 농산물의 품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내 농산물의 비가격 경쟁력이 향상된다는 점이다. 생명, 환경, 관광, 여가 공간으로서 농업·농촌이 지닌 새로운 가치가 부각되고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고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관광 여가활동 공간으로서 농촌에 대한 기대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린투어 등 다양한 농업의 활동영역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외소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러한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적극 활용해 농가·소비자·도시민 등 3색 만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농가의 소득기회가 증가하고 소비자의 이익도 증대된다. 또한 여가와 문화에 대한 수요 증대에 맞춰 농촌지역의 경관 환경 자연에 대한 수요 충족을 함으로써 농가와 농촌주민의 소득기회가 증가하고 도시민의 후생을 증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의지와 변화가 중요함은 물론 정부와 함께 정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관련 기관들이 농민 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개혁돼야 하며 특히 농협중앙회가 과감한 개혁을 통해 농민 조합원과 지역농협을 위해 봉사하는 자조적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농업정보**